“광주도시철도 공사장 인근 상가, 하루하루 폐업 공포”

심철의 시의원, 5분 발언서 매출·안전 등 피해실태 고발 “처참하다”…대책마련 촉구

광주시의회가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 공사 지연으로 생계가 끊길 위기에 놓인 공사장 인근 상인들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광주시의회 심철의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4)은 3일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인 운천저수지~풍금사거리 공사 구간 상가들은 숨을 쉴 수 없는 상태에 몰려있다”며 “지난 10월 16일 이후 도로 통제로 차량 접근이 차단됐고, 공사 펜스가 가게 앞까지 붙어 보행로가 한 사람 겨우 지날 정도로 좁아졌다”고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공사장 인근 상인들은 매출 하락과 안전문제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 피해가 집중된 금호지구 공사구간 앞에 위치한 식자재마트는 9월 대비 10월 매출이 2,000만원 가까이 감소했고, 의류 매장들은 성수기 고객 유입이 끊겨 생계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게 심 의원의 주장이다.

심 의원은 또 “굴착과 중장비 작업으로 소음, 진동, 분진은 물론 지반 침하에 바닥 균열까지 안전 문제도 심각하다”면서 “상인들은 사비로, 실리콘과 시멘트를 사서 갈라진 바닥을 메우며 임시로 버티고 있다”며 현장 상황을 전했다.

공기 지연과 공사, 도로 통제, 차량 진입 차단 방식에 대한 상인들의 자기결정권이 없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심 의원은 “이번 사안의 핵심은 광주시가 약속한 공기 지연 이후 발생한 추가 피해로, 제시된 일정을 믿고 버텨왔는데, 제때 지켜지지 않으면서 참혹한 상황을 만들었다”며 “상인들은 공기 지연으로 발생한 영업 손실 등 추가 피해에 대해 최소한 책임 있는 지원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금호지구 상가 민원과 관련해 진출입구 단절 등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매출 감소에 대한 영업보상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며 “행정이 공사 지연으로 사실상 생계 수단을 끊어놓고도 법적으로 보상 근거가 없다며 뒤로 빠지는 것은 시민을 사지로 밀어넣고 모른 척 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성토했다.

심 의원은 “하루하루 폐업 공포에 휩싸인 상인들의 삶은 처참하다”며 “약자가 희생되는 구조인 도시철도 2호선 공사를 조속히 끝내야하며, 공사 구간 상인들을 위한 대책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광주시에 △상권 접근성 회복 방안 마련 △상가 피해실태 조사 △공사일정·도로 개방 계획 공개 △공기 지연에 따른 손실 지원 모델 설계 등을 요구했다. 심 의원은 “제도가 없으면 설계하면 되고 직접 보상이 어렵다면 지역화폐나 소비쿠폰, 공공기관 우선 구매 형태로 매출을 유도하거나 공영 주차 지원, 시민 유입 캠페인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심 의원은 발언 말미에 “공사의 이익은 광주 전체가 나누지만 공사 지연 피해를 상인에게 떠넘기는 것은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다”며 “도시철도 2호선이 시민 모두의 자산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애란 기자

강기정 광주시장, 청년들과 소통

강기정 광주시장이 3일 한국폴리텍대학 광주캠퍼스에서 ‘인공지능(AI)으로 여는 광주의 미래, 청년의 역할’을 주제로 청년들과 소통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도시철도 2호선 도로개방률 최저 34%·최대 93%

광주시 “12월22일 개방 완료” 1단계 개통은 2027년말 예상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 구간 도로 개방을 오는 12월 22일까지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완료하겠다고 약속한 광주시가 10월 말 기준 도로 개방률을 공개했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1~6공구 도로 개방률은 34~93%를 기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공구 93% △2공구 34% △3공구 60% △4공구 52% △5공구 66% △6공구 75%로 집계됐다.

가장 개방률이 낮은 곳은 2공구로, 서구 금호지구 입구 교차로에서 월드컵경기장 구간까지다.

이 구간은 거대 암반이 발견돼 토목공사가 늦어진 데다 7~8월 집중호우와 상수도관 파열로 공사 구간이 침수 피해를 보면서 공정이 지연됐다.

침수 피해로 고압 전력선 안정화 조치가 늦어지며 한국전력과의 협의 절차가 지연, 다른 구간보다 도로 복구율이 낮았다.

광주시는 현재 전력선 안정화 조치가 속도를 내고 있어 내달 22일까지 예정된 도로 복구 완료를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당초 올해 개방 대상이 아니었던 20개 정류장 주변 도로도 작업 속도가 빨라져 4곳을 제외하고는 연내 개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앞서 강기정 시장은 12월 22일까지 도로개방이 안되면 시장직을 그만두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올해 도로 복구가 어려운 정류장 4곳은 △2공구 204(금호지구 입구) △205(금호시영1단지) △3공구 210(해태2차아파트) △6공구 219(중흥삼거리) 정거장 등이다.

지하차도 건설과 함께 진행 중인 백운광장은 이번 도로 개방 대상에서 제외돼 내년에야 복구가 가능할 전망이다.

광주시는 현재 1단계 구간 공정을 재조정 중이며, 개통 시점을 다시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계획보다 1년가량 지연된 점을 고려하면 2027년 말에 1단계 구간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애란 기자

도의회 “정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적극 나서라”

서대현 의원 발의 건의안 채택 4대 국고·정책사업 이행 촉구

전남도의회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지원을 촉구했다.

전남도의회는 3일 열린 제395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교육위원회 서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2)이 대표발의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정부 책임 이행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대한민국 해양·섬 정책의 전환점이자, 지속가능한 섬 발전모델을 제시하는 국제 행사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박람회 성공을 위한 정부 4대 국고지원 사업과 4대 정책사업이 여전히 검토단계에 머물러 있어 지역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여수섬 여객선 반값 운임 지원 △연안 크루즈 운항 △2026세계어촌대회 여수 개최 △AAM(미래항공교통) 특별시연 등 총 51억원 규모의 4대 핵심사업 반영을 촉구했다.

또 △2026년 섬 방문의 해 지정 △중앙지방협력회의 여수 개최 △부정기 국제선 운항 허가 △UN ‘섬의 날’ 지정 추진 등의 국가 정책사업 조속 확정도 요청했다.

서 의원은 “여수세계섬박람회는 단순 이벤트가 아니라 대한민국 해양 르네상스의 출발점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시험대”라며 “정부가 말하는 지방시대가 허상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실행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도와 여수시가 수년간 준비해온 노력이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빛바래서는 안 된다”며 “지역이 먼저 움직였으니 이제 중앙정부가 화답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정근산 기자

“제2우주센터·우주항공산업진흥원 고흥으로”

송형곤 도의원 건의안 대표발의 “통합형 우주산업 생태계 완성”

전남도의회가 정부가 추진중인 제2우주센터와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의 고흥 설립을 강력 촉구했다.

전남도의회는 3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안전건설소방위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고흥1)이 대표발의한 ‘제2우주센터와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의 고흥 유치 및 설립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송 의원은 “2032년 첫 민간 발사를 목표로 하는 제2우주센터는 단순한 발사 시설이 아닌 재사용 발사체 운용과 민간 상업 발사, 우주물류 시장 진출을 이끌 핵심 전략기지”라며 “그 최적지는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출발점이자 나로우주센터를 보유한 고흥이다”고 강조했다.

고흥은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우주발사체 특화지구와 우주항공 국가산단(46만평)이 연계된 국내 유일의 우주산업 집적지다. 또 재사용 발사체 회수에 유리한 평지 기반, 이미 축적된 발사 운영 경험 등은 타 지역이 대체할 수 없는 비교우위로 평가된다.

송 의원은 이어 “대전에는 항공우주연구원, 경남에는 우주항공청이 있는 반면 유일하게 전남만이 산업화 기능에서 소외된 불균형 구조에 놓여 있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은 반드시 고흥에 설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이 고흥에 설립될 경우 제2우주센터와 연계해 연구·시험·발사·산업화가 한곳에서 이루어지는 통합형 우주산업 생태계가 완성될 것”이라며 “이는 우주항공청의 정책 기능과 산업 현장을 직접 연결하는 가장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는 11월 27일 누리호 발사가 예정돼 있는 지금이 대한민국이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정부는 제2우주센터와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을 반드시 고흥에 설립해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심장을 완성하고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의 균형발전에도 이바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근산 기자

기사제보받습니다.
jndnnews@naver.com